

# 어촌 뉴딜로 전남 어촌·어항 새 관광 거점 떠오른다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지역 특색에 맞게 개발하는 어촌 뉴딜 300에 대한 어민들 관심이 뜨겁다. 보성지역에서 진행된 사업 설명회. <전남도 제공>



여수시 삼산면 의성항에서 진행된 사업 설명회. <전남도 제공>



신안군 암태면에서 진행된 사업 설명회. <전남도 제공>

**비약의 시작점에 선 새 천년 전남**

<목 차>

- 제 1부 성장 기반을 닦다
- 제 2부 곳곳에 활력 샘솟다
- 제 3부 미래 도약 나신다
- 제 4부 지속성장 동력 갖추다



어촌 뉴딜 사업 시행 전 보성군 벌교읍 상진항의 모습. 국비와 지방비 등 100억원이 투입되는 어촌 뉴딜 사업을 통해 방파제, 선착장 등 기반시설이 개선되고 어민센터, 공동 작업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전남도 제공>

## 2024년까지 300곳 선정해 어촌 뉴딜 ... 전남 63개 포함·최종 100개 선정 목표 정부, 3조135억 투입 선착장·여객터미널·어촌체험센터 등 마을 실정 맞게 정비

공동 게스트하우스 등을 각 마을 실정에 맞게 신축하거나 정비하는 사업들이다.

총 4차례 진행되는 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에는 전남지역 어촌·어항 63개소가 포함됐다. 전국 최대 규모다. 2019년 첫 공모에서 전남은 15개 사군 26개 어촌·어항이 사업 대상지 목록에 올랐다. 26개 사업 대상지에는 2021년까지 3년간 국비 1625억원, 도비 209억원, 시·군비 488억원 등 모두 2322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대상지 26곳은 목포시 달리도항, 여수시 안도항 등 3곳, 순천시 화포항, 광양시 외우포구, 고흥군 선정항 등 2곳, 보성군 상진항 등 2곳, 장흥군 노령항, 강진군 서중항, 해남군 두모항 등 2곳, 무안군 신월항, 함평군 함평항, 영광군 송이도항 등 2곳, 완도군 솔지항 등 2곳, 진도군 창유항 등 2곳, 신안군 진리항 등 4곳이다.

26개 사업 대상지는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착공된 상태이며, 신안 만재항의 경우 연내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어촌뉴딜 300 사업으로 만재항 여객선 접안시설이 개선돼 주민들은 종선(從船)으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지 않게 된다.

올해 2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0개 사업 대상지에는 전남지역 어촌·어항 37개소가 포함됐다. 2차 공모 역시 사업 대상지 목록에 전남 어촌·어항이

장 많이 포함됐다. 2022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전남지역 어촌뉴딜 사업에는 국비 2625억원, 도비 337억원, 시·군비 788억원 등 총 사업비 375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 대상지 37개소는 목포시 울도항, 여수시 독정항 등 5곳, 순천시 외은항, 고흥군 용동항 등 3곳, 보성군 군학항 등 2곳, 장흥군 대리항 등 3곳, 강진군 망호항, 해남군 갈산항 등 3곳, 무안군 닭머리항 등 4곳, 함평군 석두항, 영광군 대신항 등 2곳, 완도군 4곳, 진도군 가사항 등 2곳, 신안군 다물도항 등 5곳이다.

이들 사업 대상지 37곳은 설계 작업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오는 2021년, 2022년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 공모를 이어간다. 이전 2차례 공모에서 뽑은 190개 사업 대상지에 더해 2021년 60곳, 2022년 50곳을 선정함으로써 어촌 뉴딜 300 사업 대상지 전체를 모두 확정하게 된다.

전남도는 남은 2차례 공모에서 전남지역 어촌·어항 37개소를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체 300개 사업 대상지에서 33%에 해당하는 100개소를 전남 어촌으로 채우겠다는 게 전남도 목표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전남도는 15개 사군 72개 어촌·어항을 2021년도 공모 사업에 신청했다. 여수 12개소를 비롯해 신안 12개, 완도 8개, 해남 7개, 고흥 6개, 진도 4개소 등으로 한 곳당 평균 사업비는 100억원 수준이다.

이번 공모 사업 신청을 이해 전남도는 참여 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 역량 강화교육을 지원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해 준비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사업 신청 어촌을 대상으로 10월 중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10~11월 현장 평가를 진행한다. 12월 말 사업대상지 60개소를 최종 선정, 발표한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까지 추진된 정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 공모에서 전남도는 전체 190개소의 33%에 해당하는 63개소가 선정됐다"며 "이를 통해 국비 4250억원을 포함해 총 6072억원을 투입해 어촌과 어항을 개발하는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 국장은 "어촌뉴딜 300 공모 사업에 대한 주민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낙후된 전남의 여건상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공모 사업 대상지에 전남 어촌·어항이 다수 선정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어촌 뉴딜 300 사업 대상지 1000개로 늘려야”

전국 어촌·어항 2170곳 중 300곳 선정·개발... 나머지는 낙후 개선 요원 뜨거운 공모 열기...사업 효율 위해 공모 시기·사업 기간 연장 목소리도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 중인 어촌 뉴딜 300 사업 대상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지역 특색과 실정에 맞게 개발하는 어촌 뉴딜 300에 관한 관심과 참여 열기는 날로 뜨거워지는데 사업 대상지 선정 규모가 턱없이 작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이 열악해 소규모 항·포구, 지방어항 등에 제대로 된 투자를 못하고 있던 전남도는 사업 대상지를 1000곳으로 확대해 어촌·어항을 관광 및 일자리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맞게 전국의 300개 어촌·어항(국가 어항 제외) 시설을 현대화하고, 마을 특

색에 맞게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별로 수십~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전체 총사업비는 3조135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해 어촌 주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 어촌은 선착장·여객선대합실, 방파제 등 어촌 필수시설을 개선하고 마을이 품고 있는 역사와 문화, 산업 등 고유 자원을 살려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펼 수 있다.

그런데 사업 대상지가 제한적이다 보니 전국 어촌에서 대상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북받쳐 지듯 쏟아지는 것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어촌과 어항은 전국에 걸쳐 2170곳에 달한다.

전남지역에는 전체의 49%에 해당하는 1066곳이 있다. 2170개 어촌·어항 가운데 단 300곳만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탈락한 어촌을 중심으로 박탈감도 생겨나고 있다.

전남도 섬해양정책과 고재갑 주무관은 "대부분 어촌은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지만, 접근성과 개발 여력이 떨어져 해를 거듭할수록 공동화되고 있다"며 "정부, 지자체 예산으로 낙후된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어촌 마을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공모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9일 마감한 2021년도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에 전국의 어촌마을 236개소가 신청서를 제출, 3.9대 1의 높은 경쟁률

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공모 경쟁률인 2:1(신청 250, 선정 120)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공모 수요 급증에 따라 전남도는 사업 대상지를 기존 300개소에서 1000개로 확대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전남도의회의도 지난 7월 어촌 뉴딜 300 사업 대상지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전남도에 힘을 실었다. 일각에서는 개별 대상지 사업비 규모를 줄이더라도 수혜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촌 뉴딜 300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 제도 개선 목소리도 다양하게 제기된다.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생활 SOC 등 기반시설 확충이 급선무이지만, 어촌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해선 소득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무게를 뉘어야 한

다는 의견이다.

사업 효율을 위해 공모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어촌 뉴딜 300 공모가 일반 공모와 달리 연말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어,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 지연으로 예산 편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3년이라는 사업 기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주민 주도로, 개별 어촌 특색을 살려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스스로 사업 방향과 내용을 확정 지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유사 사업인 농산어촌 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기간이 각각 5년, 3~6년이라는 게 지자체 설명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